

民 1호법안 ‘일하는 국회법’ 발의... ‘식물국회’ 사라질까

토론회·의총추진 거쳐 발의...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의장 별도 기구이관 상시국회 전환, 회의 출결 공개 등 담길 듯...통합당 등 야당 협조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의 막판 다듬기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공약이었던 ‘일하는 국회법’에는 그간 국회의 잦은 파행 원인으로 지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를 상시국회로 만드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일하는국회 추진단(단장 한정애)’은 6차에 걸친 회의를 마치고 법안 조문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토론회와 정부의 의견 청취가 완료되는 대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고 이르면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국회 상시국회 전환 △분회의·상임위 회의 등 출결현황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 △국정감사 정기회 이전 실시

등을 담은 내용을 발의한다.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간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에 의해 진행되던 국회의 의사일정을 국회법에 명시해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 파행을 줄이고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사위에서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체계·자구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가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게 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법안의 발목을 잡아 왔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권한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길 계획이다. 각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의장 산하 별도 기구에서 체계·자구 검토의견을 받은 다음 상임위 전체 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리는 절차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기구는 의원이 아닌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돼 검토 의견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법제’ 기능이 빠진 법사위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과 관련한 내용만 소관하게 된다.

상시국회도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매년 9월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 이외 임시회는 2·4·6월의 첫날에 열리도록 규정했지만 ‘회기는 의결로 정한다’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여야 교섭단체 협의에 임시국회 일정이 위임됐고 야당은 일정 협의를 지렛대로 삼아 국회 파행을 장기화시켰다. 이에 따라 본회의는 월 2회 개최, 상

임위는 월 4회 이상 강제로 개최하도록 국회법을 손볼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임위·분회의 의원 출결 현황을 회의 다음 날 바로 공포하고, 상임위원장도 월 단위로 소관 상임위의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의 회의 불출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윤리특별위의 경우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회의장 직속 윤리조사위를 구성해 제소 내용을 조사한 뒤 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6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리특별위를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한 법사위와 병합해 상설로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감사 내실화도 추진된다. 통상 9월 정기국회가 열린 후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달을 할애하는 국정감사를 국회법대로 정기회 이전인 5~6월로 앞당기고, 국감으로 인해 11월에야 겨우 시작됐던 예산 심사를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추진단은 오는 11일 ‘일하는 국회’를 위한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입법조사처와 법학자, 헌법학자, 정치학자, 언론인 등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최종 의결을 수렴하고 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야당 원내대표와 함께 발의한다는 구상이지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공동 발의 여부는 미지수다.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서다. 허은아 의원 등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5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국회 분회의 상시 개최 △상임위 상시운영 △국무청원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여야 공동발의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 진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공동발의 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의 일부 내용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병석 신임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김태년 “국회법대로” vs “관행대로” 주호영

엇갈린 양당 원내대표의 한 달 김태년, 일하는 국회 드라이브 주호영, 與 막을 수단 없어 고심

177석 대 103석, 거대 여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과 수적 우위에 밀리는 미래통합당의 수싸움은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의

첫 겨루기는 21대 국회의 개원이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정시개원을 밀어붙였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항의 후 본회의의 퇴장으로 맞섰다. 이들의 진짜 첫 승부는 오는 8일이 법정시한인 원 구성 협상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사령탑에 오른 김 원내대표의 취임 한 달은 야당에 대한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는 일에 집중했다. ‘일하는 국회’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은 야당이 반박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실렸다. 김 원내대표는 한 달 전인 지난달 7일 “일하는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는 출사표를 던졌다.

그로부터 한 달,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사표대로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 중이다. “국회법대로”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그의 원칙론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지난 5일 열게 했다. ‘국회법대로’ 정시개원에 일단 성공한

셈이다.

다만 개원 협상 불발로 통합당이 불참했다.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의원 193명만 참석한 가운데 6선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다름으로 ‘반쪽짜리 단독 개원’을 한 것이다. 이는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첫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다음 걸음을 내딛겠다”고 못 박았다. 역시 ‘국회법대로’ 8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과 의 상견례와 여의도 모처에서 이뤄진 민찬 회동 자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이견이 큰 탓이다.

김 원내대표의 ‘취임 한 달’에 대한 당내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세워놓고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등의 강도 높은 압박 메시지가 잘 먹혀든 것 같다”며 “통합당이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오겠다는 전략도 통합당의 허를 찔렀다”고 평가했다.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소통도 적극적이고 시원 시원한 성격”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사위와 예결위 둘 다 우리가 가져오지는 못하겠지만, 예결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北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시사 통일부 “정상 간 합의이행”

통일부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가능성 시사’에 남북 간 합의사항을 이행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7일 “정부는 기본 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통일선전부가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등 조치를 언급하며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이후 처음 나온 정부 입장이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앞서 언급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폐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선전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 배라(전단)를 날려보낸 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 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정 노동당 제1부장은 지난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담화를 내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